

# 사후 활용방안 “원상복구 vs 응급도로” 분분

### 77억여 원 시민혈세 낭비 ‘논란’ 시 감사위 감사의결...시기 미정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은 설계 단계부터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지산IC 안전성 관련 용역결과는 이미 예고됐던 바,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산IC 진출로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 등 감사절차를 따라야 하는 사안으로 구체적 날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수기 광주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해 지산IC 진출로 설치에 관한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이 누락된 점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산IC 진출로 설치하는 지리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민 공청회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내용”이라며 “부정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



광주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진출 실패율과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나건호 기자

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산IC 진출로 설치지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적정선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IC 진출로가 설치되기 위해선 최소 675m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

만 지산터널과 산수터널 사이에 위치한 지산IC 진출로는 터널간 거리가 짧아 (460m-520m) 이격거리가 7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지산IC 진출로

는 선택지점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에서는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부터 지적돼 온 ‘이격거리 미확보에 따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된 배경에 초점이 맞춰질 것

으로 예상된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우측 진출 방식에서 좌측 진출 방식으로 변경된 과정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해 제기한 초기 검토 의견서 조작 의혹도 밝혀질 지 주목된다.

지산IC 폐쇄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사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사후활용에 대해 “차차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원상복구’ 혹은 ‘유지’ 가운데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경우 이미 8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철거비용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비용부담이 적은 ‘유지’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유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고처리 공간이나 응급차량 도로가 대표적인 예다.

배원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용역은 광주시 최대 현안의 하나인 지산IC 진출로 개통 여부의 정책결정에 참고할 의미 있는 자료”라며 “향후 개통 여부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과 진출로 활용 방안 및 대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15파전... 광주·전남 “균형발전 최우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공모전이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0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공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로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만 15개 지자체가 신청해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반도체 특화단지 경쟁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남양주·화성·용인·이천·평택·안성과 인천, 대전·충북·경북·경남·부산 등 13곳이다. 이 중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7개 지자체와 인천은 ‘수도권’이며,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충북·경북·경남·부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나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장 발 빠르게 지난해 7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건의문을 발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명시한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을 최우선에 뒀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은 경북도, 경남도 등 비수

도권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수출국인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들고 나오면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아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28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 의제로 반도체를 다룰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육성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제안 신청서만 접수한 가운데 이후 진행될 로드맵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큰 틀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연내 전국에 최대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만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구도 급변을 예고하자 특화단지 유치전에 나선 수도권 지자체들은 ‘균형발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균형발전론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광주시는 ‘AI(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등에, 전남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황지 기자

# 뚝방마켓

2023. 3. - 12. SAT. 11:00-18:00

기차마을 전통시장 인근 뚝방길

#수공예품 #건강먹거리 #문화이벤트

@dukbang\_market